

##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

정부는 8.12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한승수 재정경제원장관, 김우석 내부무장관, 정종택 환경부장관,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 등 9개 부처 장관과 권이혁 대학민국학술원 회장, 이규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 안병훈 신문편집인협회 고문, 노용희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회장, 이인규 자연보호중앙협의회 회장, 박윤흔 대구대 총장 등 9인의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된 “환경보전위원회”를 개최하고 “물관리종합대책” 및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을 심의.확정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김영삼대통령이 발표한 환경복지구상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특히 최근 시화호와 임진강 오염 등의 수질오염문제, 여천공단 오염문제, 대구시 오존문제 등으로 인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환경보전의지를 담은 종합계획이 마련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날 확정된 물관리 종합대책 및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물수요가 계속 증가될 전망이고, 총강수량의 2/3가 우기(6-9월)에 집중되어 갈수기에 수량부족과 수질악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고 10년 뒤면 물부족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15년을 내다보는 수자원확보대책과 인구증가 및 산업화로 인해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현 시점에서 물의 오염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수질개선대책분야로 나누어 전국 어디서나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한다는 목표로 10대 중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에 따르면 7개 정책과제를 선정, 2005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수행되는 장기계획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소요투자액이 57조 4,900억원으로 편성시켜 놓고 있다.

<편집부>

# 환경정책

## I. 물관리종합대책

### < 수자원 확보와 공급대책 >

#### (1) 댐 건설 중장기계획 마련

- 2011년까지 34개 댐을 건설하여 용수예비율을 9%까지 확보하며,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몰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33개 상습가뭄 시군지역에 대하여는 광역상수도, 식수전용댐 등을 건설하여 2000년초까지 식수부족 문제를 완전 해결

#### (2) 광역 및 지방상수도 확충

- 전국 단위의 상수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까지 47개 광역 상수도와 361개 지방상수도를 확충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의 82%에서 95%로 제고

#### (3) 지하수 개발과 수질관리 철저

- 금년내에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수법"을 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 개발시 "허가제"를 도입하고 폐공오염방지를 위해 "폐공에치금제"를 도입하며, 지하수 기초조사업무를 통산부에서 건교부로 이관

#### (4) 선진기술 개발과 수계연결방안 연구

- 상습 식수난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과 국지적 가뭄 지역의 해갈을 위해 해수담수화와 인공강우 기술개발을 2000년까지 추진하고, 한강, 낙동강, 금강 등 수계간 연결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연구사업도 실시

#### (5) 물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 물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98.2월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원가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여 추가수입은 전액 수도물 수질개선사업에 투자하며, 호텔, 백화점 등 물다량 소비업체에 대하여는 중수도 설치를 권장

#### (6) 홍수통제기능과 댐 방류체계의 과학화

- 2000년까지 임진강 등 중소하천에 홍수예경보시설을 설치하고, 댐관리에 필요한 물의 유입량, 저수량, 방류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댐을 과학적으로 관리

### < 수질개선대책 >

#### (7) 하수 및 오폐수처리시설의 대폭 확충

- 2005년까지 하수처리장 244개소, 축산폐수처리장 65개소, 공단폐수처리장 68개소 등 총 4,181개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하수처리 및 하수관거 보급률을 80%로 제고코자 하며, 부족재원(지방양여금 부족분 : '97-2005년까지 약 5조 5천억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지방양여금중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배분비율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한 지방양여금 규모(주세)를 늘려 그 증액분을 수질개선사업에 투입하거나 그 해당액을 일반예산에서 지원

#### (8) 배출원 방류수 수질관리의 강화

- 오염배출 원천지부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질환경기준을 200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개별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규제도 강화

#### (9) 상수원 보호시책 강화

- 상수원 보호를 위해 42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이 음식, 숙박시설 등 위락단지화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상수원 보호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주민을 위해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원을 체계화

## (10) 수계별 수량·수질조사 정보화 추진

- 수계별 수량·수질에 대한 기초조사를 체계화하고, 조사한 기초조사를 정보전산화함과 아울러 '96년중 행정전산망을 통해 부처간 공동활용토록 상호 연결함으로써 수량과 수질을 연계한 관리기능을 제고

## II.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

### 1.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

기업의 생산양식과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생산과 소비활동 모두가 환경보전 실천의 장이 되도록 유도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및 청정생산기술개발 본격 추진

- 업종별, 품목별로 에너지, 물 등 환경자원 사용 표준 단위 목표 설정

-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공정기술 개발

- 폐자원 사용의무율, 회수율의 제고

- 환경친화적 기업경영활동으로 확산

○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 환경정책” 수립·추진

- 환경농업 시범단지를 매년 27개씩 조성

- 농약·비료 사용 감축 및 축산분뇨 퇴비화 추진

- 상수원보호구역, 산촌형 등 권역별 환경농업 모형 개발

○ 환경친화적 소비행태 구축

- 시·군·구별 중고품 상설 교환센터 설치 및 알뜰시장 운영

- “음식물 안남기기” 실천으로 음식쓰레기 감축 ('95)0.42kg/인.일-->(2001)0.35-->(2005) 0.30

- 환경마크제 활성화 및 환경상품 공동구매 확대

### 2. 환경자치제의 확립 및 환경교육 강화

○ 지역환경의 자치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범국민 참여 촉진

○ 환경교육을 통한 올바른 환경윤리관 정립 및 실천의 지 함양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역량 제고

- 지방자치단체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지역환경 기준의 설정·지원

-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민간단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환경신문고 128” 활성화 및 “환경음부즈만”제도 운영

○ 신(제7차)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편시 학교환경교육을 강화하고 특별활동, 체험학습, 봉사활동 등을 학습평가 과정에 반영

-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을 초·중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 운영('96 : 8개교 --> 2001 : 60개교)

- 교육부, 교육청등 교육행정기관에 환경교육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기반조성

○ 사회환경교육 강화 및 녹색환경 실천운동 확산

- 시민환경강좌, 주부환경대학 등 민간단체의 환경교

# 환경정책

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녹색환경 실천운동”을 사회봉사단체 및 종교단체 등의 중점활동으로 유도

### 3. 환경기준의 선진화 및 환경기술 개발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기술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

- o 2001년까지 먹는물 수질기준 및 대기수질환경기준을 WHO 권고수준으로 강화

- 먹는물 수질기준

	'95	'96	'97-'98	2001까지
조사물질 항목	25	25	50	72
수질기준 항목	43	45	85	120

- 대기기준

	현행	개선목표	WHO기준
SO <sub>2</sub> (ppm, 연평균)	0.03	0.02	0.019-0.023
TSP(μg/입방미터, 연평균)	150	90	60-90
PM-10(μg/입방미터, 일평균)	150	100	70

- 수질환경기준 항목을 현 14개에서 28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중점 관리

- o 배출농도 중심의 현행 규제방식을 농도와 양에 비례하여 규제하는 총량적 부과방식으로 전환

- o 환경기술개발 투자 확대

- GNP대비 공공부문 환경관련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0.016% --> 0.03-0.05%)

### 4. 환경기초시설의 완비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급증하는 환경오염 물질을 삭감하고 자연의 자체정화능력 회복

- o 2005년까지 하수처리율 및 하수관거보급률을 80%로 제고

	'95까지	'96	2005
하수처리장(개소)	71	8	236
하수처리율(%)	45	50	80
하수관거보급(km)	51,874	1,817	33,153
관거보급률(%)	61.6	62.2	80

- o 2001년까지 상수도 관련시설 확충 및 취약지역 급수난 해소

- 광역상수도 21개소 추가 건설
- 취.정수장(844개소), 고도정수처리장(45개소), 노후수도관(42,757km) 및 급수시설 개량
- 상수도시설이 열악한 296개 시.읍.면지역의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 농어촌지역 자연마을 5,000개소에 암반지하수 개발
- 간이상수도중 용량이 부족한 8,656개소의 개량
- 65개 도서지역(248개 섬)의 생활용수 개발

- o 기존 매립위주의 폐기물처리방식에서 자원재순환형 폐기물 종합처리 방식으로 전환

(단위 : %)

	'95	2001
재활용	23.7	35.0
매립	72.3	45.0
소각	4.0	20.0

## 5. 환경관리기능의 강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통합.조정기능 강화

### o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

-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능을 전문화하고 평가기법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
-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정부실천강령” 준수. 전기.에너지 및 물 사용량을 2000년까지 10% 절감
- Green GNP개념도입을 위하여 경제계획과 시책사업시 환경자원 소모 및 오염비용을 고려

### o 환경분쟁의 조정기능 강화

- 주민단체와 환경단체에 당사자 자격을 부여하여 지역. 주민간 및 자치단체.국가간의 분쟁도 적극적으로 조정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예상피해분쟁도 조정대상으로 포함
-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보강

## 6. 환경외교의 강화

국제환경협약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도국 환경보전사업 지원 등 국제사회에서의 지구환경보전 노력에 실질적 기여

### o 환경과 무역 연계대응 및 환경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참여

- 무역규제조치를 포함하는 오존층보호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바젤협약 등에 대한 능동적 대응

### o UN주최 “97 세계환경의 날”행사 유치

- 지구환경문제 해결의 실천의지를 담은 “서울선언” 채택

### o 해외 환경정보 수집을 위해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 소재지 공관의 환경외교활동 강화

-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 및 환경외교 교육확대
- '97 유엔환경특별총회에 대비하여 전문대책반 구성. 운영

### o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와의 환경협력 강화

- 대기오염물질 장거리이동 조사, 황해오염 조사 등 공동 추진

### o 한반도 환경공동체 추진

- 통일대비 북한의 환경실태 정보 축적 및 민간차원의 환경협력사업 추진

### - UNDP의 비무장지대(DMZ) 생태계 보전사업 추진

이번에 확정된 『물관리 종합대책』 및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은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곧바로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96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예산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97년 예산에 반영하여 대책들의 실효성을 확보할계획이다.